

# 제4차 UPR에서 드러난 한국사회의 인권과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림 변호사



# 1. UPR이란?

Universal Periodic Review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 매 4.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를 대상으로 모든 인권 이슈를 검토

: 유엔 회원국이 상호간에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평가받는 제도

: 국제인권 조약기구/ 특별절차/ UPR → 유엔의 3대 인권감시체제

# 1. UPR이란?

: 대한민국은 2008년 5월, 2012년 10월, 2017년 11월에 이어  
2023년 1월 4번째 검토를 받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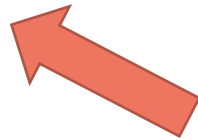
: 검토 근거 문서

- 유엔헌장
- 세계인권선언
- 인권규범문서
- 해당 국가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출마 시 약속한 자발적 선언 및 공약
-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

## 2. 시민사회 개입가능성

### 1)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 대한민국이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작성하는 **유엔 정보보고서**
- 이해관계자보고서



## 2. 시민사회 개입가능성

### 1)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

2022.7.14.  
461개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

## <목차>

I. 배경	
A. 국제 의무와 이행의 범위	
B. 국가인권위원회	
C.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II. 국제인권기준의 이행	
A. 코로나와 인권	
5. 엄벌주의와 범죄화	
6. 사회적 소수자 차별과 건강불평등	
7. 위중증환자의 치료권 제한	
8. 코로나19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9. 코로나 시기의 집회의 자유	
B. 평등과 비차별	
10.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1.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권리	
12. 인종차별	
C.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13. 사형제	
14. 고문방지	
15. 치료감호소 수용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D. 법의 집행과 법치	
16. 군대 폭력과 불처벌 - 자살, 고문, 지연된 배상	
17. 군대내 젠더 폭력 - 성폭력	
18. 군대내 성평등 - LGBT+ 권리	
19. 과거사청산	
20. 일본군성노예제	

E. 사생활에 관한 권리	
21. 노동감시와 노동자 개인정보 침해	
22. DNA 수집	
23. 인공지능 기술과 기본권 보장	
24. 주민등록제도 개선	
25. 통신의 비밀 보장	
F. 종교 또는 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공적, 권리	
26. 집회의 자유	
27. 명예훼손, 모욕 형사처벌 제도	
28. 온라인 정보 차단 제도	
29.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30. 선거기간 동안의 표현의 자유	
31. 양심적 병역거부	
32. 국가보안법	
33. 보안관찰법	
G.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34. 모든 노동자에게	
35. 모든 노동자를 위	
36. 좋은 일자리	
37. 산업재해와 노동	
38. 기업과 인권	
H. 사회보장권과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39.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	
40. 건강보험	
41. 공공병원	
42. 노인돌봄 및 노인학대로부터의 보호	

43. 노인빈곤과 공적연금	
44. 상병수당	
45. 주거권	
I. 소수자	
46. 장애인	
47. 장애인 노동	
48. 이주노동자	
49. 이주구금	
50. 인신매매	
51. 난민과 난민신청자	
52. 결혼이주여성	
53. 이주민 건강권	
J. 여성과 아동	
54. 아동권리 이행 일반	
55. 아동친화적 사법제도	
56. 보편적 출생등록	
57. 입양	
58. 아동보호체계	
59.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60. 학교에서의 아동인권	

## 대한민국 인권 전반의 모든 이슈 대상 종합 보고서

64.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성폭력	
65.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66. 미혼모의 권리	
K. 발전권	

## 2. 시민사회 개입가능성

### 2) UPR pre-session 참가



각 이슈별 로비문서 만들어 각국 대표부에 미리 전달  
→ 해당 이슈에 관한 권고를 요청하는 로비



## 2. 시민사회 개입가능성

### 3) 주한 대사관 미팅

각 이슈별 로비문서 만들어 각국 대표부에 미리 전달

→ 해당 이슈에 관한 권고를 요청하는 로비 / 각 국의 관심사 파악 필요

(캐나다, 주한 EU대표부, 멕시코 등)



## 2. 시민사회 개입가능성

### 4) UPR 심의 모든 과정 이슈화

각 단계에서 **보도자료, 기사, 칼럼** 등 배포하여  
국제사회의 관심, 정부의 태도 이슈화

**461개 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NGO보고서 제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8개 인권 주제 담아**

**461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  
유엔 UPR 프리세션 참석해  
한국 인권 상황 브리핑 예정**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 권고 이행 상황 점검 촉구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인권 상황 보고

NGO 사무국인 참여연대 보도자료 발취

### 3. 제4차 UPR 본심의 – 2023. 1. 26.



-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소개
- 총 98개 국가 → 총 263개 권고
- 대한민국 정부 1차 답변



### 3. 제4차 UPR 본심의 – 2023. 1. 26.

**95개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총 263개 권고 내려**

수용의사 밝힌 권고, 구체적 일정과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해야

- 48개국 :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성평등 촉구
- 30개국 : 사형제 폐지
- 27개국 : 성소수자 권리 보장
- 20개국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11개국 :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 3. 제4차 UPR 본심의 – 2023. 1. 26.

1) 수용 : 총 263개의 권고 중 정부가 1차로 수용의사를 밝힌 97개 권고

: 인종차별과 혐오근절을 위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장애인 탈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여성차별철폐/ 적절한 주거권 보장 등

2) 유보 (2023년 6월 인권이사회 회기 전에 최종 결정)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대체복무제 개선, 균형법 92조의6 폐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사형제 폐지 등

### 3. 제4차 UPR 본심의 – 2023. 1. 26.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보편적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 ” 하겠다는 한국정부

- 4차 UPR 절차를 통해 국제 사회의 한국에 대한 우려를 확인

‘여성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성소수자 권리보장’

→ 1, 2, 3차 UPR 심의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권고. 수용하고 이행을 논의해야 할 시기

→ 2023년 6월 본심의 결과 지켜봐야 할 것.

감사합니다 ☺

공감의 활동에 함께 하고 싶다면~

